

# “산재 사망 사고, 민·관 조사 필요” 강조

### 민주노총, 광주고용노동청에 산재 위험 업종 전수 조사 제안

### 사업장 규모별 예외·유예 기간 등 지적...법 개정 필요성 강조

### 중대재해법 통과 사흘 만에 광주·전남 산업 현장서 2명 숨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기업체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에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을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  
로 유사업종 대상 전수 조사를 벌이  
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광주 북  
구 오동동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전남 플라스틱 재생 공  
장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앞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  
트에서 사망했다”며 “명백한 기업 범  
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라고 주장했  
다.

아울러 “이 같은 재해는 열악한 노  
동 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  
사였다”고 규정, “최소한의 안전 장  
비·지침이 갖춰지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  
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업체  
(故) 김재순씨가 숨진 지 1년도 지나  
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유

사 업종에 대해 전수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광주고용노동청은 듣지 않았  
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  
되는 형식적 재발 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다시는 이러  
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조사  
를 펼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  
해야 한다”며 민·관 논의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구의 참여 주체로는 민주노총 광  
주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명시했다.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  
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가칭)로 명  
명할 해당 기구는 중대재해 위험 기업  
조사, 결과 공개까지 책임지고 진행하  
게 될 것이라도 노조는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으  
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연간 산재 사  
망자는 2400여 명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  
명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년간 법 적용 유예 등을  
예로 들어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라  
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예외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끔 중대재  
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  
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된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에 광주·전  
남에선 산업 재해가 잇따르며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날 낮 12시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선 일용  
직 노동자 B(51·여)씨가 파쇄기에 끼  
여 숨졌다. 해당 재생업체는 상시 근  
로자가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44분께에는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내 유연  
탄 종합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  
A(33)씨가 석탄 운송대에 끼여 병원  
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봉우기자

## 나주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80대 노인 사망

전남 나주에서 80대 노인이 후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지  
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께 나주시 봉황면의 한  
식당 앞 도로변에서 A(80)씨가 B(50·여)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를 119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오후  
7시16분께 사망했다.

운전자 B씨는 주차 중인 차량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쟁 업주 감금·폭행한 조폭 추종자 등 3명 2심도 실형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했던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추종자 등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  
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12일 강도상해·인질강  
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C(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  
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B·C(24)씨는 각각 징역 4년·7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  
무 무거워 부담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B·C씨는 2019년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한 도심에서 D(25)씨를 집  
단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2시간 동안 감금, 130만 원과 성매매 업소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폭 추종 세력인 A씨는 과거 D씨와 D씨의 친동생과 성매매 업소를 동업  
하던 중 다쳤고, 이후 따로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 후배인 B·C씨로부터 ‘성매매 알선 업체 개업을 준비하는 데 도  
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경쟁 업체인 D씨의 업무용 전화를 빼앗기로 공모했  
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C씨는 당시 미성년자를 꼬드겨 D씨의 업소에 보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D씨를 때리고 차에 가둔 뒤 D씨의 동생으로부터 금  
품을 건네받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D씨의 업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시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에 범행을 계획한 뒤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 죄  
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실형을 선고했다.

## 전남도, 1월 말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함  
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  
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증대를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  
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과잉생산을 조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이다.

전남도는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 어  
구도 몰수하고 사법조치 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 사고 예  
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겨울방학 기간 학원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일부 학원, 옥내·외 현수막·SNS 등 선행학습 상품 광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은 12일 “겨울방학 기간 광주 지역  
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를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  
해 “학원·교습소 밀집 지역을 대상  
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 실  
태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원에서  
‘중1·2·3 국어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적발했다”  
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  
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  
어진 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  
시에서 교육 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예로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

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법이라  
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학원은 옥내·  
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 SNS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  
고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  
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  
만 불린 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경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